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송갑석, 강원·TK 권리당원 투표 8위 기록 21일 광주·전남 연설회 이후 순위 바뀔듯 대표 경선 이재명 압승...74.8% 득표 ‘독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뇌관 부상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에서 유일한 호남 지역구 출신 후보인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광주 서갑)가 출마자 8명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 최고위원은 최종 5명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성적은 강원과 대구·경북(TK)권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만 반영한 것인데, 최고위원 경선 1·2위를 차지한 정청래(29.86%), 고인정(22.50%)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6명 후보는 모두 10% 이하의 득표에 그친 것이어서 오는 21일로 예정된 광주·전남 권리당원의 투표 결과가 반영되면 최종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전국 순회경선 첫 지역으로 강원·대구·경북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최고위원 경선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정청래 후보와 고인정 후보가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3위는 박찬대 후보 10.75%, 4위는 장경태 후보 10.65%였다. 또 5위는 서영교 후보 9.09%, 6위는 윤영찬 후보 7.83%, 7위는 고영인 후보 4.67%, 8위는 송갑석 후보 4.64%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 경선은 이재명 후보가 70%대 득표로 1위를 차지, 이 후보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대변되는 대세론을 일찌감치 꺾으며 독주 체제를 강

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 지역 합산 결과를 보면 이 후보가 74.81%의 득표율로 1위에 올랐고, 박용진 후보는 20.31%, 강훈식 후보는 4.88%로 뒤를 이었다. 1위와 2위의 득표율 차이는 54.5%p, 2위와 3위의 차이는 15.43%p다.

1위와 2위, 2위와 3위 득표율이 예상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2·3위 간 후보 단일화 논의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부

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대표 경선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각각 반영하는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제외한 대의원·일반당원 투표 결과는 전국 순회를 마친 뒤인 28일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한꺼번에 발표한다.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14일과 28일 두 차례에 나눠 발표한다.

민주당은 강원·대구·경북, 제주·인천에 이어 13일 부산·울산·경남, 14일 세종·충청·대전, 20일 전북, 21일 광주·전남, 27일 서울·경기 등을 돌며 경선을 이어간다. 28일에는 전국 대의원대회가 열려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최종 당선자가 확정된다.

한편, 민주당은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개정 문제를 두고 진영(전 이재명) 후보와 비영(비 이재명) 후보가 맞붙을

조짐을 보여 관심을 끈다.

새 뇌관으로 부상한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당 당원총회 개시판에는 이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최근까지 약 7만명 가량이 여기에 동의했다. 권리당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는 지도부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번 청원은 여러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를 위한 맞춤형 청원이라는 해석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 후보에게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공세를 벌이고 있는 비영계에서는 이번 청원을 두고도 ‘이재명 방한용’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김진수기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둘째 날인 7일 제주시 난타호텔에서 열린 제주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가운데) 당 대표 후보가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의도 클럽

서동용 ‘조기입학 반대 토론회’ 개최

5세 조기입학 반대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지난 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유기홍·강민정·도종환·문정복 의원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학부모, 교원, 시민, 교육관련 단체 등 31개 단체도 공동주최한 가운데, 일반 학부모들의 큰 관심 속에 열렸다.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학제 개편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정책”이라며 “급작스럽게 그것도 정권 초기에 무리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통보한 배경과 국민적 동의나 공론화 과정이 없었던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입학연령 하향은 국민이 원



하는 대로 정책 폐지만이 답”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오늘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관부터 차관, 차관보까지 교육정책에 대해 무지한 정책 결정권자들이 내린 잘못된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이제라도 교육부장관이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신정훈 ‘감사 공정성·투명성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7일 ‘감사원의 소위표적, 감압조사로부터 감사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감사 절차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감사 공정성·투명성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 관련자의 출석·답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편지이나 조작 등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녹화 시작·종료 시간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출석·답변조서, 증명서, 조사 녹화영상을 포함해 감사 결과의 입증·참고자료로 사용된 문서 등 증거 기록은 감사위원회 의결 후 목록과 원본을 10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감사 대상 공무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변상 책임의 판정, 징계 요구, 시정 등에 따른 요구·권고·통보의 대상이 된 자



는 감사 결과의 입증·참고 자료로 사용된 기록·목록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장, 감사위원, 직원이 직무 감찰시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권한을 오·남용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감사원을 도구화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과 공무원들이 이 난리통을 겪는다면 업무를 기피하고 소극·방어적으로 일하게 되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기자

與 비대위 성격·임기 논란 속 당권 경쟁 조기 점화

관리형 vs 혁신형, ‘9-10월 전대’ vs ‘내년 초 전대’ 등 이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7일 이를 앞두고 다가오면서 집권 초기 여당의 극심한 내용 사태가 수습되고 당이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절차적 준비를 사실상 모두 마쳤으며,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및 비대위원장 임명의 건을 의결하며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비대위 인선, 전대 개최 시기 등 아직 남아 있는 숙제를 고려할 때 당

분간 갑론을박이 계속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비대위가 조기 전당대회 준비에 초점을 둔 ‘관리형’이나, 아니면 당의 체질을 바꿀 ‘혁신형’이나 등 콘셉트를 두고서부터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또한 비대위 출범 직후 즉각 전대 준비에 착수해 9-10월에 새 지도부를 뽑자는 조기 전대론과 정기 국회와 새해 예산처리를 마무리한 다음 내년 초쯤 전대를 열자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전대 개최 시기는 당권 주자들의

셈법에 따라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다. 권력 구도와 맞물려 격론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찌감치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김기현 의원 등 일부 당권 주자들은 조기 전대 개최를 주장한다. 집권 초반 부담스러운 비대위 체제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면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는 조기 전대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와 시기가 겹쳐선 안 된다는 것으로, 내년 4월까지인 원내 대표 임기 등 정치적 시간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의 성격과 임기, 전대 개최 시기 등은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와도 연결돼 있다.

앞서 권 대행은 비대위의 성격과 임기 등은 출범 후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대 14명까지 둘 수 있는 비대위에 친연계가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차기 당권 경쟁도 본격적으로 개막하면서 이미 ‘몸풀기’에 여념이 없는 당권 주자들의 행보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감사원장 출퇴근 자료 제출 거부 ‘논란’

김희재 ‘감사원, ‘내로남불’ 불공정 혁신 변해’

‘상습 지각’ 제보를 이유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이 정작 본인들의 수장인 감사원장의 출퇴근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간사인 김희재 의원(여수)은 7일 “감사원의 근태관리 파악을 위해 감사원장 등의 출퇴근 시간을 질의한 결과, 감사원은 ‘출퇴근 시간은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구두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근거를 요구하자 감사원은 거부의 근거는 밝히지 않은

채 “자료는 제출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감사원은 자료 제출 답변 과정에서 김희재 의원에게 “(감사원장에 대한) 출퇴근 관련 제보 또는 문제 제기가 없어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에 게만 이중 잣대를 적용한 이유는 결국 임기가 보장된 전 위원장을 찍어낼 ‘정치 감사’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를 진행하며 부처에 자료를 요구하는 감사원이 본인들에게 불리한 답변을 근거 없이 거부하는 것도 심각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김진수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